"카트 끌고 약 쇼핑"…광주 첫 창고형 약국 '문전성시'

광산구 수완동 개점···일반·동물의약품 등 2600종 판매 영양제 등 '불티'…약사 상주해도 오남용 우려 목소리

"동종의 약을 다양하게 비교할 수 있고, 가격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앞으 로 자주 와야겠네요."

광주지역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을 어 진열돼 있었다.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 건물.

'창고형 약국'이 위치해 있다.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해당 약국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다.

~3층에 마련된 주차장은 금세 차버렸고, 주변에 위치한 도로는 방문 차량과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정체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매장 출입구 앞에는 다양한 의약품을 담 내했다. 을 수 있는 쇼핑카트와 장바구니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528.9㎡ 규모의 약국 내부는 일반의약 품부터 동물의약품이 11개 구역으로 나뉘

진열대에는 감기약이나 소화제부터 건강 지난 11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기능식품, 반창고와 같은 의약외품에 이르 기까지 2600종 이상의 수많은 상품들이 마 이곳에는 지난 4일 지역 최초로 문을 연 면돼 있었다. 의약품 매대는 일반 마트처럼 가격표가 부착된 상태였다.

연인, 가족 등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은 진열대에 마련된 의약품을 둘러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쉴 틈 없이 이어지는 방문객들로 건물 2 의약품 구입에 대한 의견을 나누거나 휴대 전화로 가격을 알아보는 등 '일반 쇼핑'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매장 한쪽에서는 약사가 방문객들의 문 의에 답해주거나 상품이 진열된 매대를 안 나 상품에 대한 문의에 대해 계산 전 상세

일부 시민들은 약사에게 "혹시 이 약이



지난 11일 광주에서 첫 선을 보인 광산구 수완동 '창고형 약국'을 찾은 시민들이 진열대에 마련된 의약품을 둘러보고 있다.

진열해주면 안 되나" 등을 묻기도 했다.

계산대에도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같이

해주고 있었다. 이들은 비슷한 효능의 약품을 구매하거

한 설명을 진행했다.

있는가", "언제 또 들어오는가", "이 약도 매할 수 있다는 점, 효능 및 성분 등 각자 약국보다 저렴하고 다양한 제품을 비교할 나, 필요 이상으로 약을 쌓아두는 일이 생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비 수 있어 좋다"고 말했다. 교·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만족감을 드러냈다.

> 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과 함께 찾았다"며 "비타민이나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했다. 인근 약국 약사는 "약사들이 상주하며

50대 정지훈씨는 "창고형 약국이 생겼 복약지도를 해준다고는 하지만 오남용, 부 작용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약 사의 전문성이 배제되기 쉽고, 의약품을 시민들은 많은 상품들을 직접 비교해 구 의약품은 인터넷보다 믿을 수 있고 시중 고르다 보면 증상에 맞지 않는 약을 사거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했다. 한편, 현재까지 개설이 허가된 전국 창고 형 약국은 경기 성남 메가팩토리약국, 경기 고양 메디타운약국, 전북 전주 메디테라약 국, 광주 광산 메가스토어약국 등 4곳이다.

기기 마련이다. 결국 국민 건강을 위협하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암호화폐' 투자 리딩 사기 일당 무더기 중형 광주보훈병원 전공의 충원율 43%…진료 차질

피해자 80명…범죄 수익금 18억5000만원

암호화폐투자리딩(매매종목추천·조 언) 사기 일당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사기미수 해를 양산했다.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35)에게 징 역 8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B씨 (41) 에게 징역 5년을, 공범 4명 에게는 각각 징역 4~5년•벌금 2000만원 을 선고했다. 각각 1393만3200원의 추징 에서 '수십억대 수익을 얻는다'는 거짓말 도 명령했다.

월까지 암호화폐 전문가를 사칭하는 이른 보를 흘린 뒤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바 '투자리딩 사기'를 벌여 피해자 80명으 로부터 1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9억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지들을 유 4526만원을 잃었다. 32명은 2023년 7월 인할 하부책, 영업수수료 정산책, 피해자 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7억5760만원의 개인정보 수집책, 각종 유튜브 영상 제작, 피해를 당했다. 팀원 관리 등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에 상장된 코인과 이름만 같은 코인 투자를 조직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투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 피 해자들이 무료 코인을 받거나, 남긴 연락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 처로 투자 권유 전화를 하는 수법으로 피

>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거래 차질을 빚고 있다. 사이트도 운영하며 투자를 권유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투자를 유도하는 영상을 제작했고, 일부 조직원은 채팅방 로 추가 투자를 꾀어냈다. 또 '코인 2종류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 가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거짓 정

이러한 조직적인 범행에 피해자 9명은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납득 또 영업 조직까지 차려 놓고 국내 거래소 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범 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고 질타했다.

내과·재활의학과·가정의학과 등 3개 진료과만 배치

충원율이 43%에 그치면서 일부 진료에 과 비교하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12일 국가보훈부 등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광주보훈병원 전공의는 9명으로, 하 반기 모집 정원 21명 대비 충원율이 43%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원된 전공 과 중 13개 과에 전공의가 배치됐다. 의는 인턴 2명, 레지던트 7명이다.

욱 뚜렷했다. ·정신건강의학과·정형외과 등 15개 진료

서울 중앙보훈병원이 올 하반기 90명 된 곳은 내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3개 과에 불과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12개 과는 전무했다.

이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진구 광주보훈병원의 올 하반기 전공의 모집 모집에 85명이 충원(충원율 94%)된 것 을)은 "정부가 전공의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지방 보훈병원에는 의사가 세부 진료과 현황을 보면 불균형은 더 오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국가유공자의 치료받을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내과·재활의학과 권리와 국가의 보훈 책임이 지역에 따라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훈부는 지방 보훈병원의 의료 그러나 광주보훈병원에 전공의가 배치 공백을 즉각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내

자녀 운동부 감독 협박한 학부모들 벌금형

부모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자신의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혐의 을 받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독을 물러나게 하려고 협박을 일삼은 학 로 기소된 A씨(57) 등 2명에게 각각 벌 판단,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이들은 지난 2022년 9월 감독 B씨에게 의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파 임영진 기자 looks@ 10단독 유형웅 부장판시는 폭력행위 등 전화 등으로 9차례에 걸쳐 사퇴를 종용하 악됐다.

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자신들의 자녀를 지도하는 학교운동부 감독이 학부모들로부터 뒷돈

조사 결과, 이들은 자녀의 성적 부진 등 임영진 기자 looks@

여성 행세로 수천만원 꿀꺽

✔마네핑 ○…데이트 애플 리케이션(앱)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수천만원을 가로 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져.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 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 게 징역 10개월을 선고.

A씨는 지난해 8~9월 한 온라 인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 B씨 에게 23차례에 걸쳐 2683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A씨는 해당 데이트 앱에서 2명 의 여성(C씨·D씨)으로 가장해 활동하며 B씨를 속였다고.

A씨는 C씨의 성관계 영상을 구 매하면 사귈 수 있게 해주겠다며

B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던 것.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성 행세로 피해자를 속여 비난 가능성이 크 다"면서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판시. 임영진 기자



